

# 국회 한달간 '개점휴업'?

### 국정감사 추석이후로 늦춰 ... '대선 전 부실국회' 재연 우려

정부가 국정감사를 다음달 17일부터 11월4일까지 19일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데 따라 지난 1일 문을 연 정기국회가 한달 이상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2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각 당의 기싸움과 당내 경선 일정 등으로 인해 새해 예산안이 부실하게 심사되는 등 '날립국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홍석 원내대표가 9일 브리핑을 갖고 제안한 내용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내달 17일부터 19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1월5,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월 7~9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이전까지는 상임위 활동만 산발적으로

로 진행될 뿐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남북 정상회담, 대통합민주신당 및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으로 인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상임위별 예비심사 외에는 본격적인 국회 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국정감사 등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1일 개회 이후 현재까지 과거정위와 법사위, 재경위 등 7개 위원회가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었으나, 장관 인사청문회이거나 현안 관련 회의여서 실질적으로 민생 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대선 전 부실국회'의 관행이 되풀이 된 데는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힘겨루기의 영향이 컸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감을 '이명박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나

서 한나라당은 무차별 폭로를 우려해 '추석연휴 전 국감불가'의 배수진을 쳤다.

대정부질문을 국감 전에 실시하자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제안도 같은 이유로 한나라당에 의해 거부됐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급주부터 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즉각 회의를 소집하고, 그렇지 않은 상임위는 회의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국회 가동을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이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국회 공전 사태가 계속되는 데 따른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 분당 샘물교회 앞 '자성 촉구' 집회



포털사이트 다음 종교토론방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100여명이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샘물교회 앞에서 아프간 피랍사태와 관련, 교회 측의 자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민심 읽지 못하는 범여권



정후식

정치부 차장

대선이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 언론사들의 관심은 호남 민심에 쏠려 있다. 최근 10년간 두 번의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호남에서 93.2%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95%에 가까운 몰표를 받았다. 이같은 투표

행태는 시대정신을 이끌어가는 '전략적 선택'으로 읽혀지기도 하고,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 시점의 호남 민심은 방향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지난 시절의 강한 응집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정당지지도에서도 대통합민주신당이나 민주당, 한나라당이 큰 격차가 없다. 부동층은 30%에 육박한다. 유권자들이 마음 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해매는 양상이다.

그 단초는 범여권 분열과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이 제공했다지만 근본적 원인은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대안정치세력의 부재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합을 기대했지만 범여권은 아직도 민주신당과 민주당, 독자후보군 등 세 갈래로 쪼개져 있다.

원내 제 1당으로 부상한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5일 예비경선 결과 발표 과정에서 후보군 순위가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혼선을 빚어 '날립정당'이란 비아냥을 자초했다. 수권능력에 대한 회의까지 들 정도였다. 여론조사 도입 여부를 둘러싼 후보들 간 대립으로 본경선 불투명하게 확정된 채 비평가들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순회 경선 흥행을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7일 첫 번째로 열린 광주 정책토론회 분위기도 한나라당 경선패와 비교하면 한산하기 그지 없었다.

민주당 후보나 독자후보군도 아직 호남인들의 표심을 흡인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것은 범여 주자들이 국가 경영 비전이나 시대정신을 꿰뚫는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난을 해결할 정책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왜 자신들을 지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일찌감치 경제 이슈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과거와 같은 진보대 보수의 이념 전선이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많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크고 '성정'과 '분배'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범여 주자들은 지금이라도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적극적인 이슈파이팅(issue fighting)에 나서야 할 것이다.

/who@kwangju.co.kr

# "검찰 조사 필요하다면 응하겠다"

## 이명박 후보 대선 D-100 회견 "2008 新발전체제 구상"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9일 "국민은 다시 한번 절실히 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정권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을 것이다. 1987년 체제를 넘어 2008년 체제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를 100일 앞두고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이나, 이것이 이번 대선의 기본 구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체제는 선진국 진입을 가져올 신(新) 발전체제"라면서 "성장의 과실이 서민에게 가장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제, 이것이 제가 꿈꾸는 2008년 체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부터 먼저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도우미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효율적 정부" 등을, "경제는 자율과 혁신의 기운이 넘쳐나야 한다"면서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생, 교육개혁을 통한 인재대국 건설 등을 각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권교체 대정정 100일'을 선언한 뒤 2008년 체제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각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이 생각하는 키워드는 역시 변화"라고 전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발전과 통합"이라면서 "국민이 바라는 변화는 경제살

리기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앞으로 100일을 정권교체 대정정의 100일로 선언한다. 정권연장 세력의 온갖 방해와 정치공작을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남은 100일 동안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겠다.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손을 잡을 것"이라고 외연 확대를 본격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세력은 시민단체나 정치권 누구나 함께하고,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있다"면서 "나를 대로 그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는 청와대가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데 대해 "한국 정치가 아직도 3류에 머물고 있다. 전 청와대가 고발한다고 했을 때 실마했지만 실제 현실로 나타났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고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 후보도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개인적 생각이지만,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면 저는 응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생각으로 당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北, 정상회담 참관 후보지 제시

### 금수산기념궁전·혁명열사릉 빠져...정부 '대체로 무난'

북한이 다음달 초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참관지 후보를 최근 남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9일 "지난 주 북측이 판문점 문서교환을 통해 다수의 참관지 후보들을 보내왔다"면서 "대체로 무난한 곳들로, 정부가 방북을 금지하고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이나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 등 민감한 장소들은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남측도 최근 북측이 제시한 곳을 포함해 이번 정상회담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참관지 후보들을 북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5곳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 참관지는 오는 18일 남측 선발대가 방북하면 현장

답사 등을 거쳐 남북 합의로 결정된다.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 북측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게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을 즐기차게 요구했고 최근 장관급회담 등에서 남측에 '참관지 제한 철폐'를 강하게 주장해 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 당국자는 "통상 참관지는 주최측이 제시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협의해 결정되지만 이번에는 북측이 사전에 '어떤 곳을 가는지 좋겠냐고 물어왔다'면서 "북측이 회담 준비과정에서 남측을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靑, 李 고소사건' 오늘부터 본격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청와대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청와대가 문제 삼은 이 후보 등의 발언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9일 "사건을 배당하기 위해 청와대의 고소 취지나 내용 등을 대강 훑어봤지만 수사 방향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10일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소환조사 등과 관련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 내용과 취지, 명예훼손 대

상, 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진의·근거·상황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한나라당의 국제청 및 국정원 수사 이외 사건 등과 연계해 이 후보 등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7일 한나라당이 청와대를 배후로 한 정치공작설을 제기했다며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문제인 비서실장 명의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고소장 접수 1시간만에 이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 /연합뉴스

**동화약품**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겉치고 뾰루지 다 소화시켜주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채표 가스활명수!**

**부채표가 없으면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신약, 고추 tink, 커피, 육두구, 현호석, 정향, 참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침두번 '사용설명서'를 꼭 읽고, 의사 처방에 상의하십시오. | 후고번호 029-0200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가스활명수**